

보도자료

(소득과 소비·노동·주거와 교통·환경·안전·사회통합)

일 러 두 기

- 「한국의 사회동향(Korean Social Trends)」은 국민의 생활과 사회 변화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계표와 그래프 중심으로 서술한 종합사회보고서입니다.
 - 본 보고서는 「한국의 사회지표」와 국가승인통계 자료를 주로 활용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 「한국의 사회동향 2017」은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와 같이 11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과 가구·인구·건강·교육·문화와 여가」(‘17.12.12.)와 「소득과 소비·노동·주거와 교통·환경·안전·사회통합」(‘17.12.17.)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공표합니다.
 - 각 영역은 해당 영역별 ‘주요 동향’과 주요 이슈에 관한 2편의 ‘주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제 선정 시 영역별 전문가(부처, 학계 등) 의견을 반영하였고, ‘주요 동향’과 ‘주제 논문’은 영역별 집필진(부록 참조)이 작성하였습니다.
- 보도자료의 내용은 「한국의 사회동향 2017」 보고서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의 목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보고서는 통계개발원 홈페이지(<http://sri.kostat.go.kr>), 국민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http://qol.kostat.go.kr>)에 공표시점에 게시합니다.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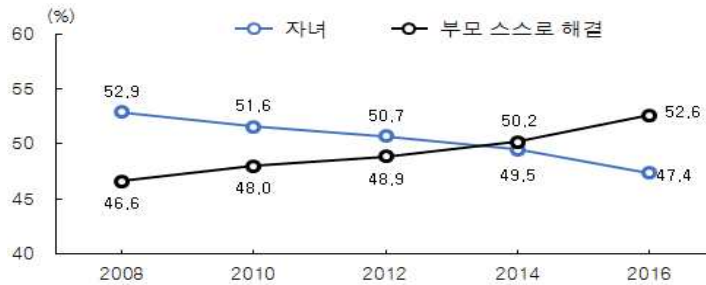
□ 요약	1
□ 주요 영역별 사회동향	
1. 소득과 소비	
가. 주택연금의 도입과 사회변화	4
나.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	6
2. 노동	
가. 최저임금 취약지대	7
3. 주거와 교통	
가. 주택형태 · 가격지수 및 차량 보급 현황	8
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실태	10
4. 안전	
가. 한반도의 지진대비 현황	11
나. 아동학대의 발생 추이와 특성	12
5. 환경	
가. 전력소비와 전원구성의 추이 및 특징	14
나. 생활화학제품의 피해 실태	16
6. 사회통합	
가. 한국의 사회갈등과 부패 인식	17

2017년 한국의 사회동향[요약]

부모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과 보유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율 증가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건수가 증가함

- 부모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은 2008년 46.6%에서 2016년 52.6%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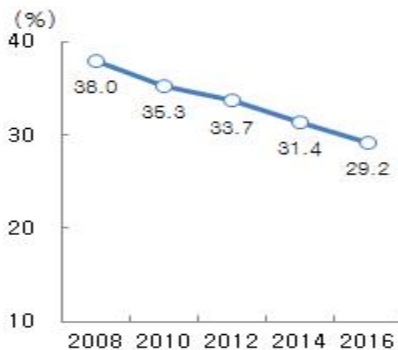
부모의 생활비 주 제공자, 2008-2016



주: 1) 가구주 응답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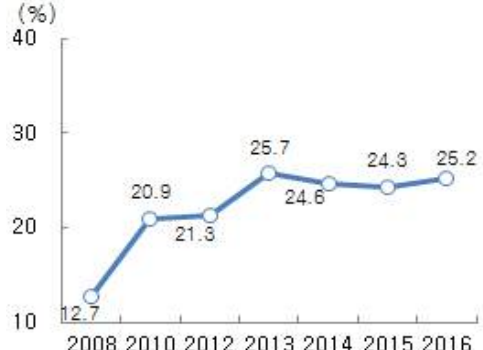
- 부모가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2008년 38%에서 2016년 29.2%로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보유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12.7%에서 25.2%로 증가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비율, 2008-2016



주: 1) 가구주 응답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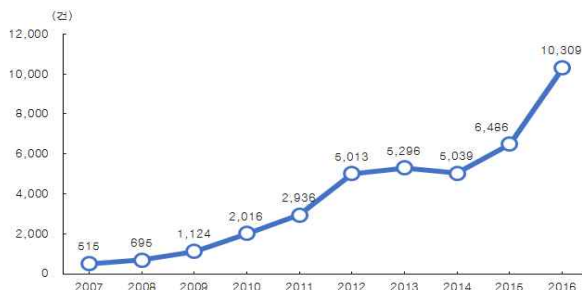
보유주택 비상속의향률, 2008-2016



주: 1) 전국 만 60-84세 주택보유자(혹은 그의 배우자)를 조사대상으로 함.
2) 보유주택 비상속의향률은 조사대상자 중 보유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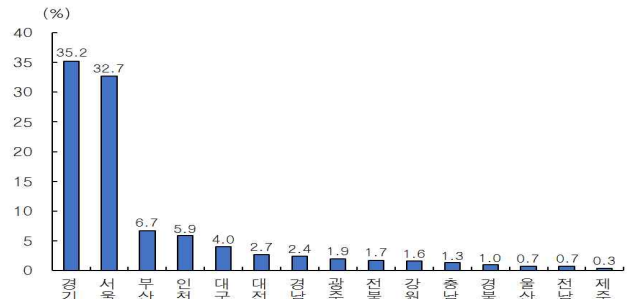
- 2016년 신규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10,309건으로 2015년에 비해 약 1.6배로 증가함
- 주택연금 가입자의 73.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주택연금 가입건수, 2007-2016



출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주택금융월보 통계편」, 각 연월.

주택연금 가입자의 시도별 구성비율, 2015. 8.



주: 1) 2007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누적 가입자수 기준임.
출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HF 이슈리포트 15-25호」, 2015. 11.

60세 이후의 소득과 소비가 급감하며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 및 보건의료비 비중이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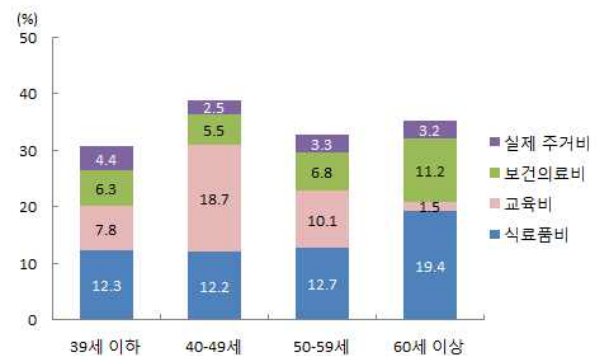
- 소득구성 비중을 보면 근로소득이 60세 이전까지 70% 이상을 차지하고 사업소득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 이전소득은 60세 이상에서 급증
- 교육비 비중이 40대에서 크게 증가하며, 식료품비 및 보건의료비 비중은 60세 이상에서 크게 증가함

가구주 연령집단별 가구소득구성, 2016



주: 1) 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경상소득 중 해당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6.

가구주 연령집단별 식료품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및 실제 주거비 지출 비율, 2016



주: 1) 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소비지출 중 해당 소비항목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임.
3) 실제주거비는 월세 지출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6.

저상버스가 2010~2016년 사이 2배가량 증가하였지만 9개 광역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전체 시내버스 중 비율은 12.1%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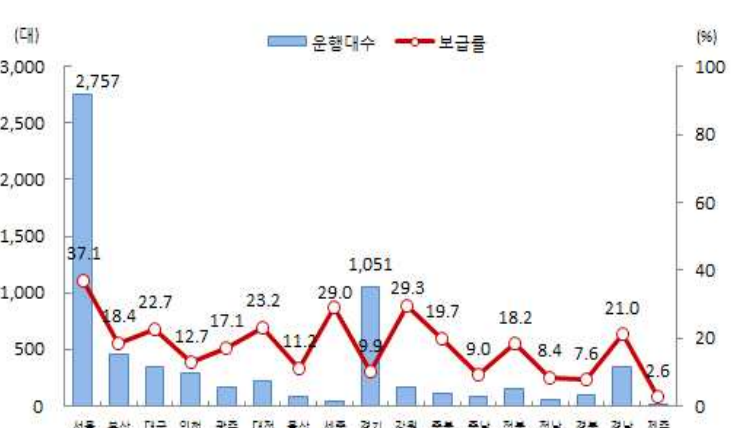
- 2005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면서 저상버스가 본격적으로 보급되어 2010~2016년 사이 2배가량 증가함, 2016년 현재 6,447대 운행 중임
- 2016년 기준 서울과 6개 광역시의 저상버스는 4,336대로 시내버스의 26.3%에 이르지만, 9개 광역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2,111대로 12.1%에 불과

저상버스 운행대수와 보급률, 2010-2016



주: 1) 저상버스 보급률은 시내버스 대비 저상버스 운행대수의 비율임.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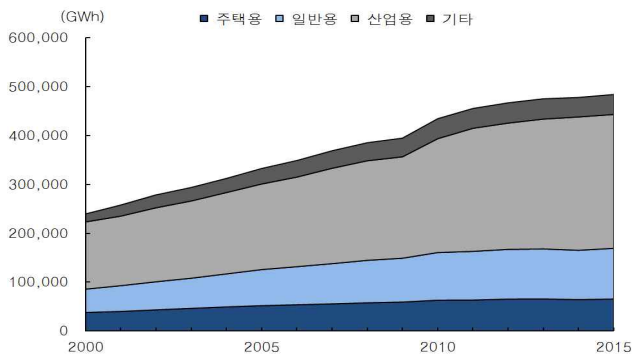
시도별 저상버스 운행대수와 보급률, 2016



한국의 전력소비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력 발전량 중 원자력과 석탄발전의 비율이 2015년 70.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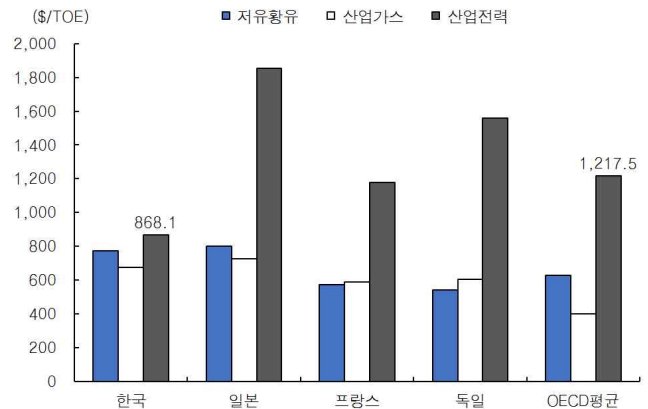
- 산업용 소비가 2015년 56.6%로 주택용 13.6%, 일반용 21.4%, 기타 8.4%에 비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OECD 회원국과 2005-2014년 10년간의 산업용 열량가격 평균치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전력요금 수준이 다른 나라들보다 낮음

용도별 전력소비량, 2000-2015



주: 1) 기타는 농사용, 교육용, 가로등 및 심야전기임.
출처: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http://epsis.kpx.or.kr/epsisn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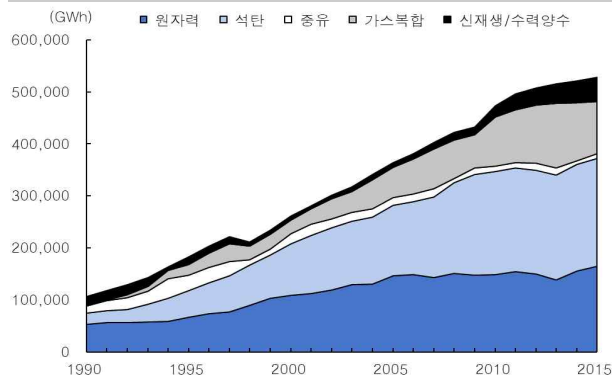
OECD 주요 국가의 산업용 에너지 열량 가격 (2005-2014년 평균)



주: 1) NCV 기준.
출처: IEA, *Energy Prices and Taxes*, 2012 Q1-2017 Q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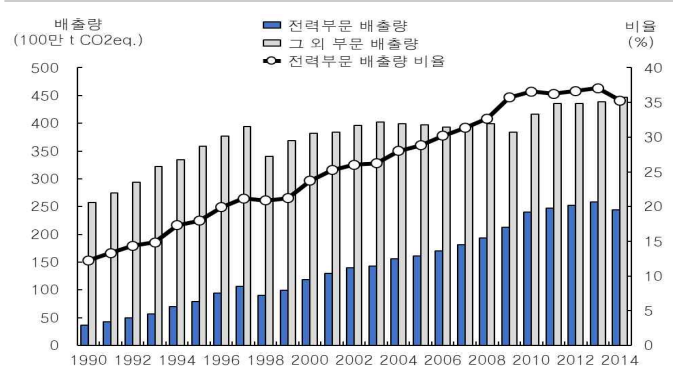
- 한국의 전력 발전량 중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의 비율이 2015년 70.5%로 70%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 온실가스 배출량 중 전력부분의 배출량은 상당한 비율(2014년 35.3%)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9년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설비별 발전량 추이, 1990-2015



출처: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http://epsis.kpx.or.kr/epsisnew/>).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율, 1990-2014



주: 1) 전력부분에 극히 미미한 열전환의 배출이 포함되어 있음.
2) 전력부문 배출량 비율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전력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6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16.

한국의 사회동향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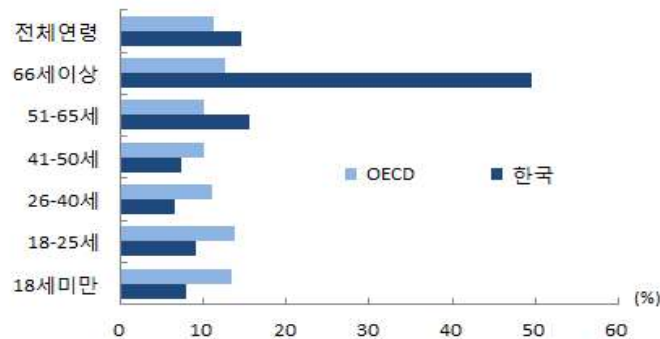
1. 소득과 소비

가. 주택연금의 도입과 사회변화

부모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과 보유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율 증가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건수가 증가함

-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 49.6%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2.6%보다 현저하게 높음

한국과 OECD의 연령집단별 상대적 빈곤율,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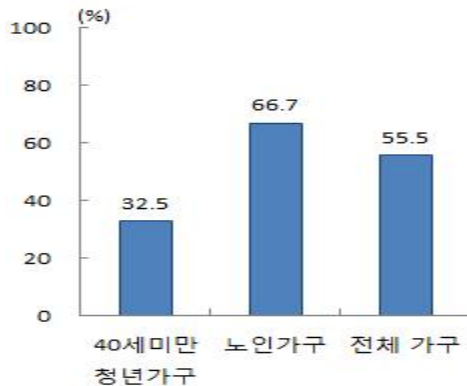
주: 1) 상대적 빈곤율은 국가 전체 중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가진 인구의 비중임.

2) 상대적 빈곤율은 가계의 자산과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중위소득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추정됨

출처: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 2016.

- 2016년 기준으로 40세 미만 가구의 주택소유 비율은 32.5%에 불과하나 60세 이상 노인가구의 주택소유 비율은 66.7%임
- 2016년 기준으로 30세 미만 가구의 실물자산 비율은 37.4%에 불과하나 60세 이상 노인가구의 실물자산 비율은 82.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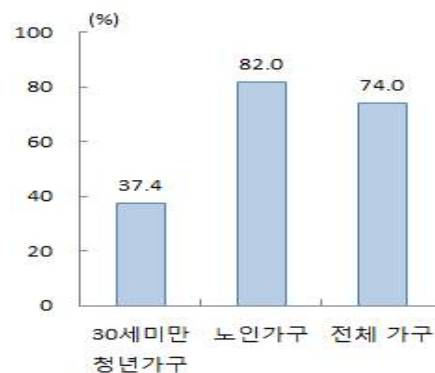
청년가구와 노인가구의 주택소유비율, 2016



주: 1) 청년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40세 미만인 가구이고, 노인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임.

출처: 통계청, 「2016년 주택소유통계」, 2017.

청년가구와 노인가구의 실물자산비율,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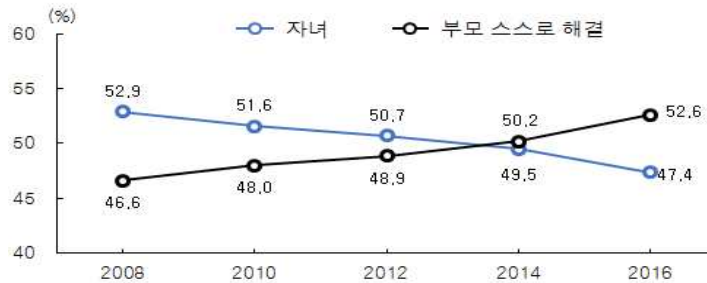


주: 1) 청년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30세 미만인 가구이고, 노인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임.

출처: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

- 부모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은 2008년 46.6%에서 2016년 52.6%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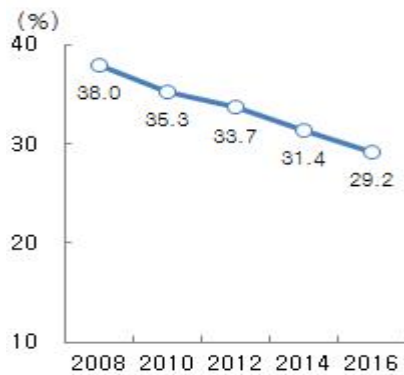
부모의 생활비 주 제공자, 2008-2016



주: 1) 가구주 응답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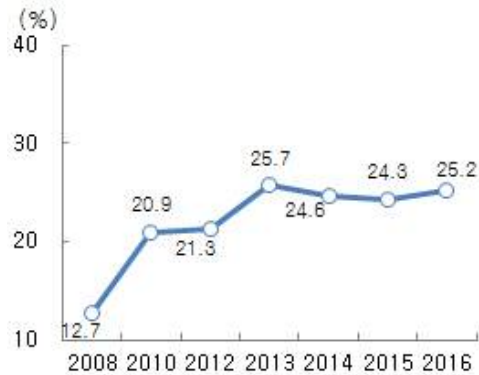
-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비율은 2008년 38%에서 2016년 29.2%로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보유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12.7%에서 25.2%로 증가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비율, 2008-2016



주: 1) 가구주 응답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보유주택 비상속의향률, 2008-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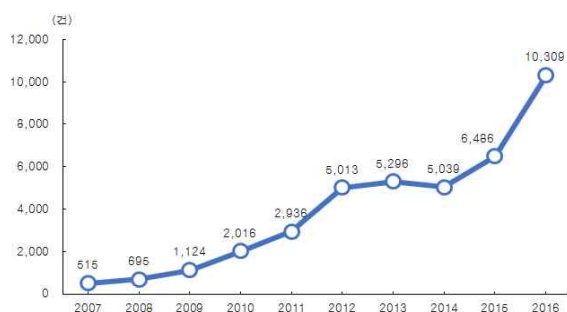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60~84세 주택보유자(혹은 그의 배우자)를 조사대상으로 함.
2) 보유주택 비상속의향률은 조사대상자 중 보유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각 연도.

- 2016년 신규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10,309건으로 2015년에 비해 약 1.6배로, 2007년 대비 약 20배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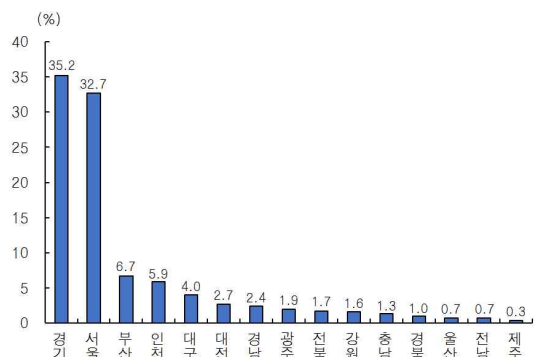
- 주택연금 가입자의 73.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주택연금 가입건수, 2007-2016



출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주택금융월보 통계편」, 각 연월.

주택연금 가입자의 시도별 구성비율, 2015. 8.



주: 1) 2007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누적 가입자수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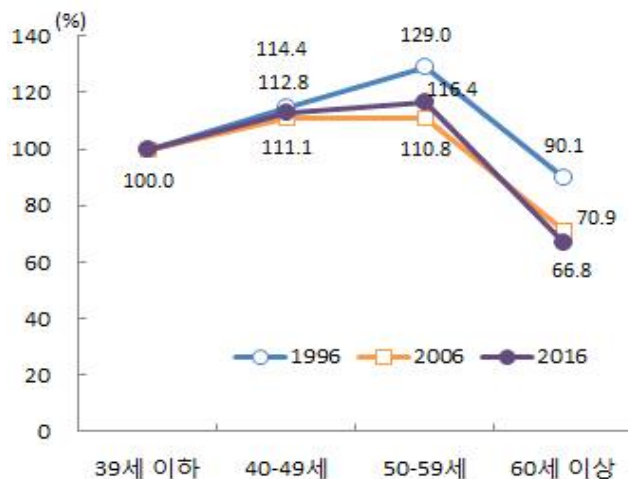
출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HF 이슈리포트 15-25호」, 2015. 11.

나.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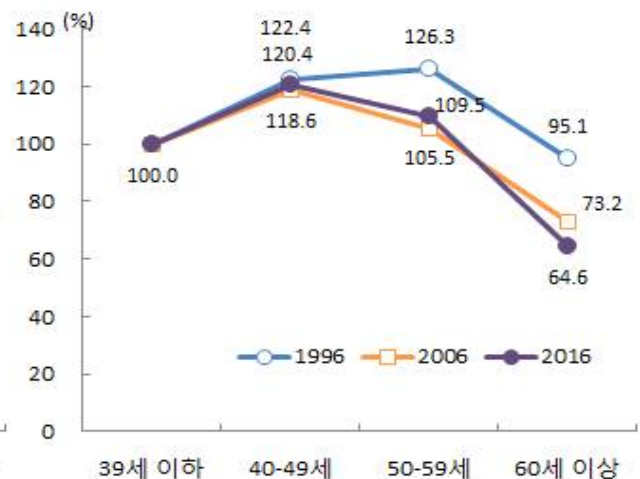
60세 이후의 소득과 소비가 급감하며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 및 보건의료비 비중이 크게 증가

- 2016년 가구소득은 정점이 50대, 가구소비지출은 정점이 1996년 50대에서 2006년 이후 40대로 바뀌었으며, 소득과 소비 모두 60세 이상에서 크게 감소함

가구주 연령집단별 가구소득 수준, 1996-2016



가구주 연령집단별 가구 소비지출 수준, 1996-2016



주: 1) 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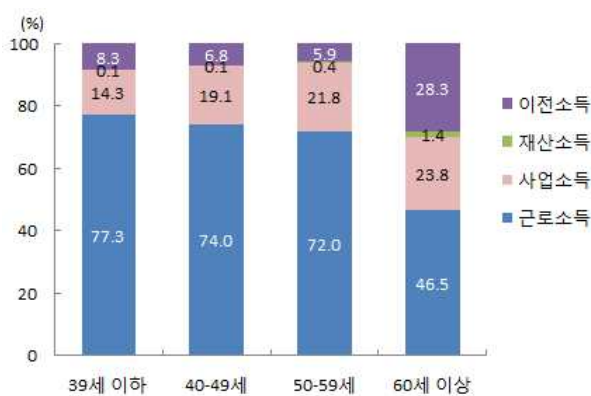
2) 가구소득 수준 통계치는 39세 이하 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하였을때 해당 연령집단 평균 가구소득의 비율임. 가구소득은 월평균 가구총소득 기준임.

3) 가구 소비지출 수준 통계치는 39세 이하 평균 소비지출을 100으로 하였을때 해당 연령집단 평균 소비지출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 소득구성 비중을 보면 근로소득이 60세 이전까지 70% 이상을 차지하고 사업소득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 이전소득은 60세 이상에서 급증
- 교육비 비중이 40대에서 크게 증가하며, 식료품비 및 보건의료비 비중은 60세 이상에서 크게 증가함

가구주 연령집단별 가구소득구성,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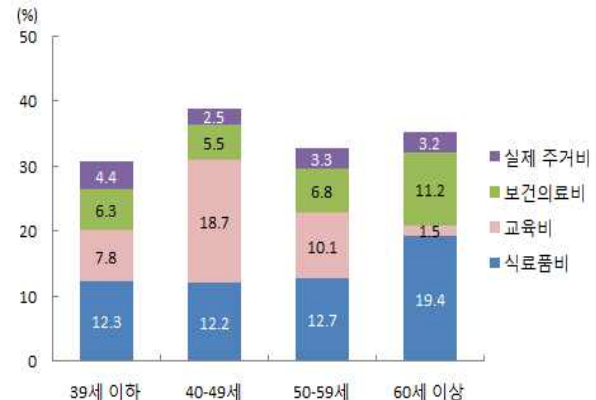


주: 1) 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경상소득 중 해당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6.

가구주 연령집단별 식료품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및 실제 주거비 지출 비율, 2016



주: 1) 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소비지출 중 해당 소비항목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임.

3) 실제 주거비는 월세 지출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6.

2.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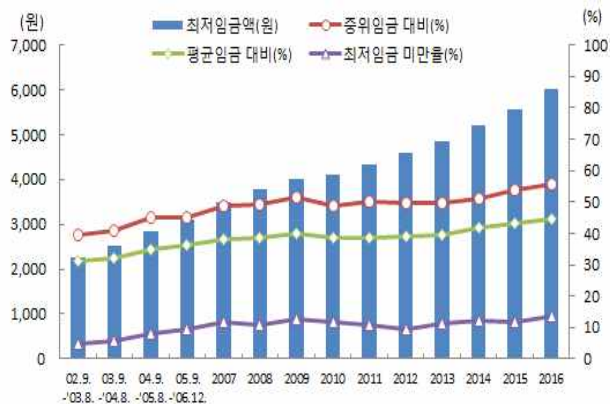
가. 최저임금 취약지대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나 최저임금미만율이 2016년 13.6%이며 여성과 비정규직의 최저임금미만율이 높음

- 최저임금은 2002년9월~2003년8월 2,275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약 2.8배로 인상되었음
- 2016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55.9%, 평균임금 대비 44.8% 수준임
-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2년9월~2003년8월 4.9%에서 2007년 이후 10~12%를 유지하다 2016년 13.6%로 높아짐

*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임금 근로자 비율임.

최저임금 금액, 상대수준 및 미만율, 2002-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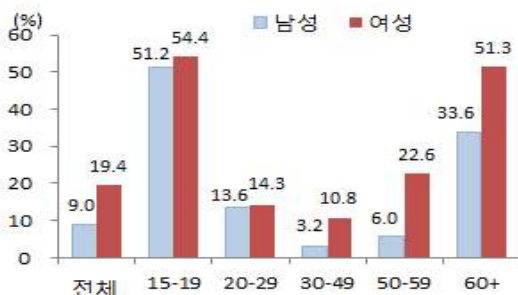


주: 1) 상대수준에서 평균 임금과 중위 임금은 시간당 임금 기준임.

출처: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 20세 미만과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으며, 여성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 정규직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이 7.1%인데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26.9%이고, 특히 시간제 근로자(41.2%)와 가내 근로자(62.2%)가 취약함

성·연령별 최저임금 미만율, 2016



주: 1)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2016. 8.

고용형태별 최저임금 미만율, 2016



주: 1)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임.

2) 호출은 일일근로자, 특수고용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내 근로자는 가정 내에 고용된 형태를 말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201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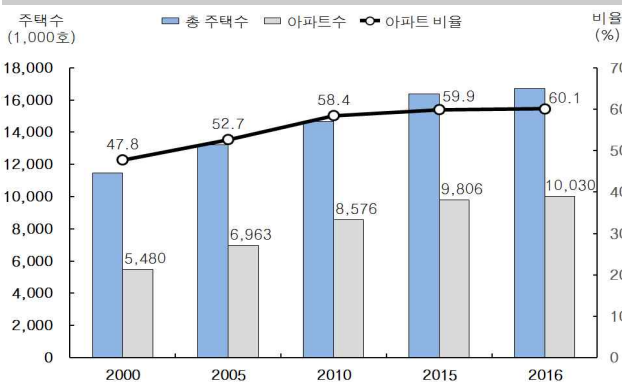
3. 주거와 교통

가. 주택형태 · 가격지수 및 차량 보급 현황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016년 60%를 넘어섰으며 자전거 노선 및 자전거도로도 크게 확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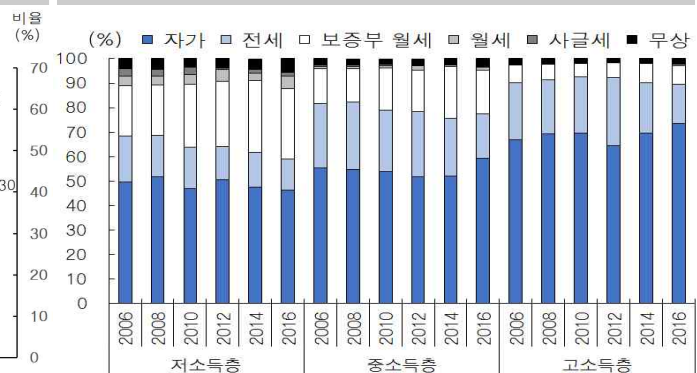
-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7.8%에서 2016년 60.1%로 12.3%p 증가함
- 2006-2016년 사이 저소득층의 전세 비중이 18.8%에서 12.9%로 5.9%p 감소한 반면, 보증부월세·월세 및 사글세 비중은 27.5%에서 35.3%로 7.8%p 증가함
 - 보증부월세·월세 및 사글세 비중은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2016년 각각 19.2%와 8.3%로 나타나 소득계층 간 주거안정성의 차이를 보여줌

총 주택수와 아파트수, 2000-2016



주: 1) 아파트 비율=(아파트수÷총 주택수)×10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소득계층별 주택점유형태, 2006-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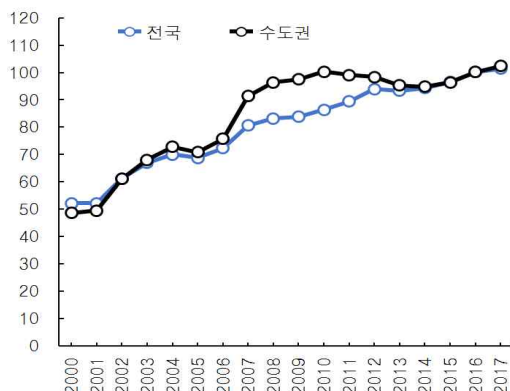


주: 1) 저소득층은 가구소득 1-4분위, 중소득층은 5-8분위, 고소득층은 9-10분위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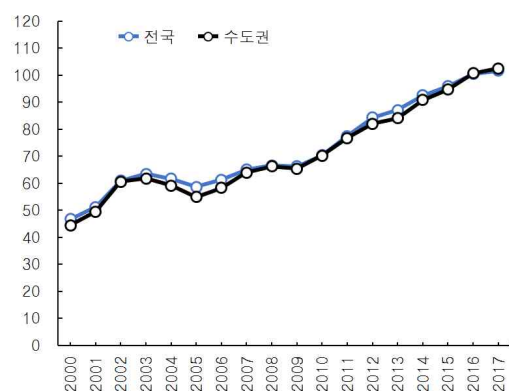
- 전국의 매매가격 지수는 2000년 52에서 2017년 101로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전세가격 지수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전국 및 수도권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종합지수, 2000-2017

1)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2)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



주: 1) 해당연도 3월 기준임. 2) 2015년 12월을 100으로 함
출처: KB국민은행,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 2017.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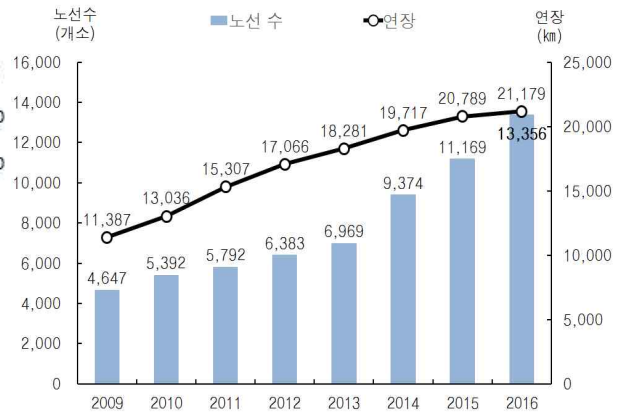
- 사람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수도 크게 증가함
 - 1,000가구당,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계속 증가하여 2017년 각각 1,137대와 431.3대로, 2000년 대비 각각 37%와 68% 증가함
- 자전거 노선은 2009년 4,647개소에서 2016년 1만 3,356개소로 약 2.9배로 증가함
 - 같은 기간 자전거도로 연장은 1만 1,387km에서 2만 1,179km로 약 86% 증가

자동차 등록대수, 2000-2017



주: 1) 2017년 자동차등록대수는 2017년 6월 기준임.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장래가구추계」, 2017.

자전거도로 노선수와 연장, 2009-2016



주: 1) 자전거도로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이며 연장은 자전거도로 등을 포함함.
출처: 행정자치부, 「자전거도로현황」,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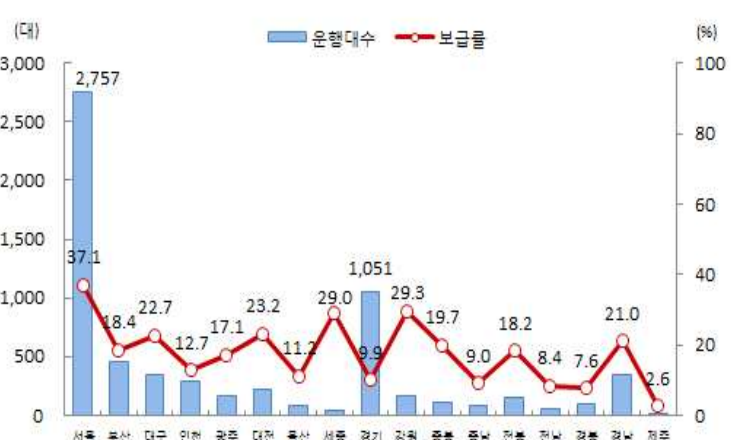
- 2005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면서 저상버스가 본격적으로 보급되어 2010~2016년 사이 2배가량 증가함. 2016년 현재 6,447대 운행 중임
- 2016년 기준 서울과 6개 광역시의 저상버스는 4,336대로 시내버스의 26.3%에 이르지만, 9개 광역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2,111대로 12.1%에 불과

저상버스 운행대수와 보급률, 2010-2016



주: 1) 저상버스 보급률은 시내버스 대비 저상버스 운행대수의 비율임.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각 연도.

시도별 저상버스 운행대수와 보급률,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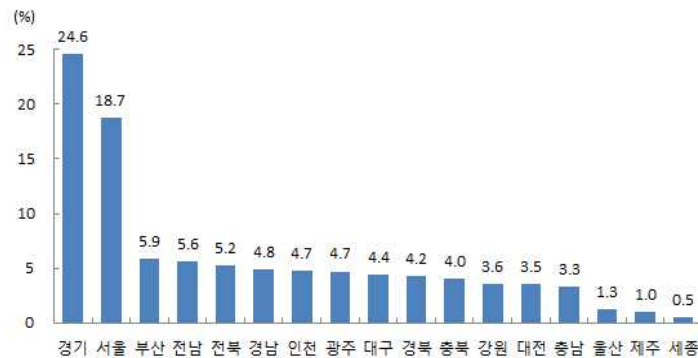


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실태

공공임대주택수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과 경기도에 편중되어 있으며, 규모별로는 중소형 공공임대주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공공임대주택은 125만 7,461호로 전체 주택 중 8.2%에 해당함
 - 지역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경기(24.6%)와 서울(18.7%)이 높으며, 그 외의 지역은 평균 3.8% 수준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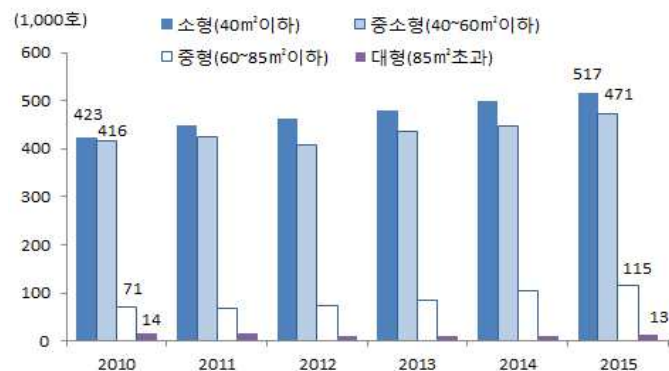
시도별 공공임대주택 비율, 2015



출처: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재고현황」, 2015.

- 면적별로 보면 대형보다는 소형과 중소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98만 7,646호로 공공임대주택 중 88.5%에 해당함
 - 2015년 소형 공공임대주택은 51만 6,727호로 2010년 대비 22.1%, 중소형은 47만 919호로 13.2%, 중형은 11만 4,762호로 61.6% 증가한데 비해 대형은 1만 2,983호로 9.4% 감소함

면적별 공공임대주택수, 2010-2015



주: 1) 전세임대 제외.
출처: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재고현황」,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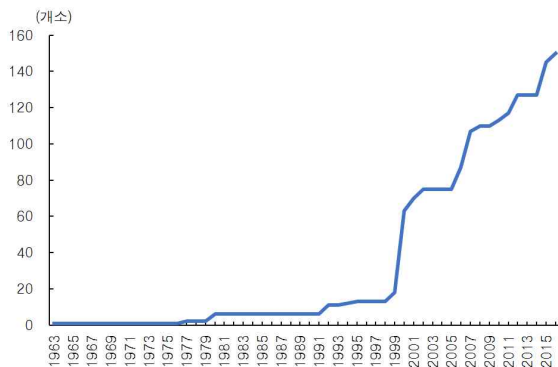
4. 안전

가. 한반도의 지진대비 현황

우리나라는 전국 156개의 지진 관측소로 구성된 관측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상의 내진설계대상 공공시설물 중 43.7%만이 내진성능을 확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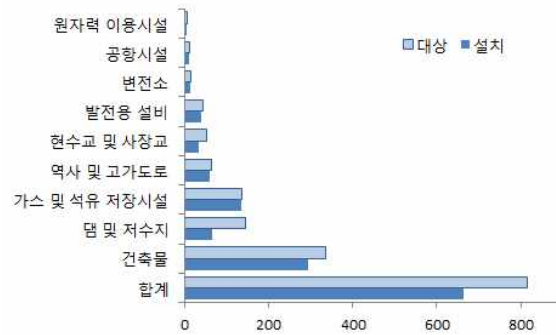
- 2016년 말 기준 전국 156개 지진 관측소로 구성된 관측망 운영
- 2009년 지진재해대책법(2013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칭)에 의해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가 의무화된 주요 공공시설물 814개소 중 663개소 (2017년 3월 기준, 81.4%)에 설치·가동 중

지진 관측소 수, 1963-2016



주: 1) 1963년 서울에 설치된 관측소는 미국지질조사소가 전 세계 표준지진 관측망 계획에 따라 전 지구적으로 설치한 127개 관측소 중 하나임.
2) 2016년 기준 156개 디지털 지진관측소가 운영되고 있음.
출처: 기상청, 「지진연보」, 각 연도; 기상청홈페이지(<http://web.km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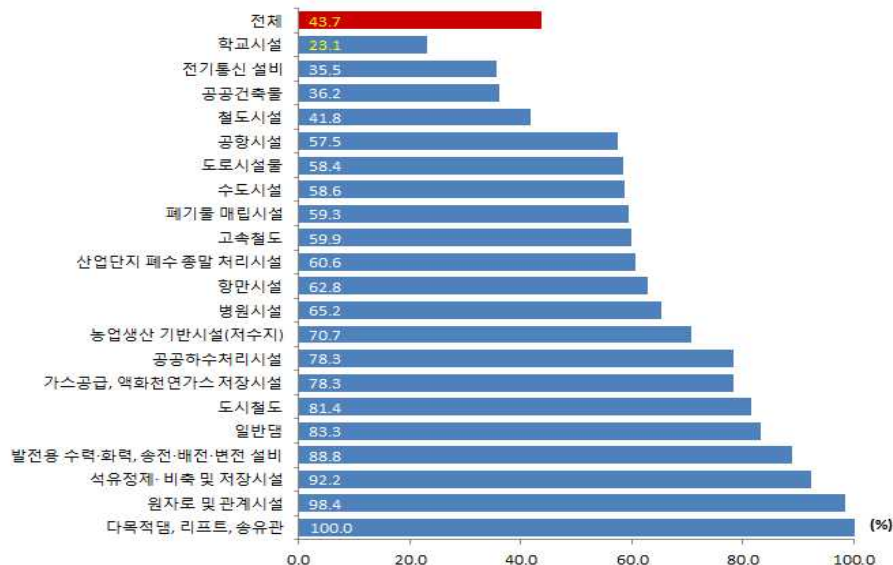
주요 시설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 수, 2017



주: 1) 2017년 3월 31일 기준임.
출처: 행정안전부 「9.12지진 백서」, 2017.

- 법률이 정한 내진설계대상 공공시설물 105,448개 중 2016년 기준 43.7%만이 내진성능 확보
- 특히 학교는 23.1%만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상당히 낮은 수준임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별 내진성능확보율,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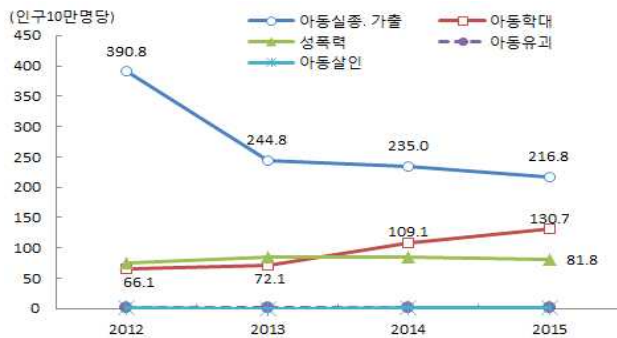
주: 1) 내진성능확보율=내진성능확보 시설물÷내진설계 대상 시설물×100.
출처: 행정안전부, 「2016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시」, 2017.

나. 아동학대의 발생 추이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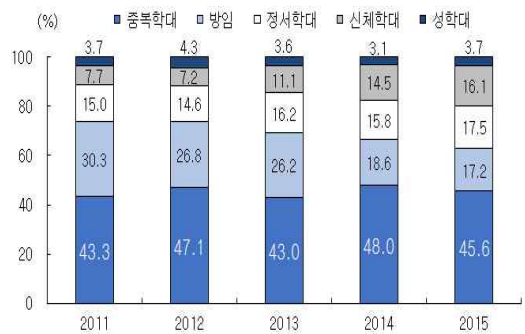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아동의 부모가 가장 많고 30~40대 비율이 70%이상이며, 거의 매일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아동대상 범죄나 위험요인 중 가장 발생률이 높은 ‘아동실종·가출’은 아동 10만명당 2012년 390.8건에서 2015년 216.8건으로 감소한 반면, 아동학대는 2012년 66.1건에서 2015년 130.7건으로 크게 증가함
- 아동학대 유형 중 중폭학대가 가장 많았고(2015년 45.6%), 방임 비율은 감소한 반면 신체학대 비율이 계속 증가함(2011년 7.7%→2015년 16.1%)

아동 대상 범죄 및 위험요인별 발생률, 2012-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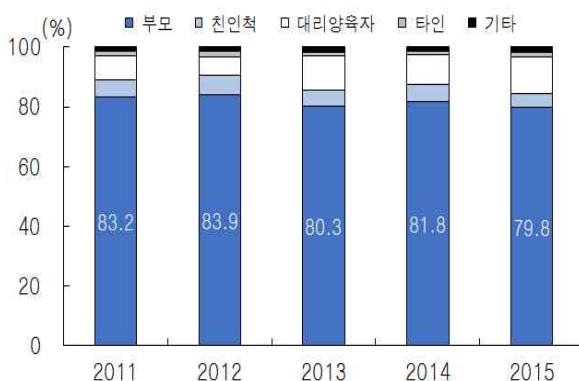
아동학대 유형별 구성비율, 2011-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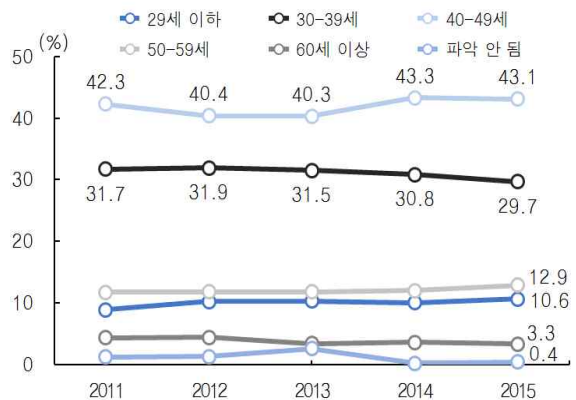
주: 1) 아동유괴, 아동성폭력, 아동살인 등은 20세 이하 피해자, 아동학대는 18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2) 실종아동법 개정(12.2.5)으로 가출인으로 접수되었던 자를 실종아동으로 재접수. 실종아동법 개정(13.6.3)으로 범위변경(14세미만 → 18세미만).
 3) 아동유괴 발생건수는 약취, 유인, 수수, 은닉, 부녀매매, 국외이송, 인신매매 중 20세 이하 피해자수임.
 4) 아동성폭력 발생건수는 강간, 간음, 강제추행, 강간등 살인, 치사, 상해, 치상, 특수강도강간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의 장소침입, 통신매체 이용 음란, 공중 밀집 장소 추행 중 20세 이하 피해자수임.
 5) 아동살인 발생건수는 살인(기수), 살인(미수, 예비, 음모, 방조) 중 20세 이하 피해자수임. 치사 제외.
 6) 발생률=(해당 범죄 발생건수÷해당 연령 주민등록인구)×100,000.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 연도.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연도. (학대유형)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2015년 79.8%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로는 40대, 30대 순이며 30~40대가 70% 이상 차지함
- 가해자가 대리양육자인 비율은 2011년 8%에서 2015년 12.2%로 증가함

아동학대 가해자별 구성비율, 2011-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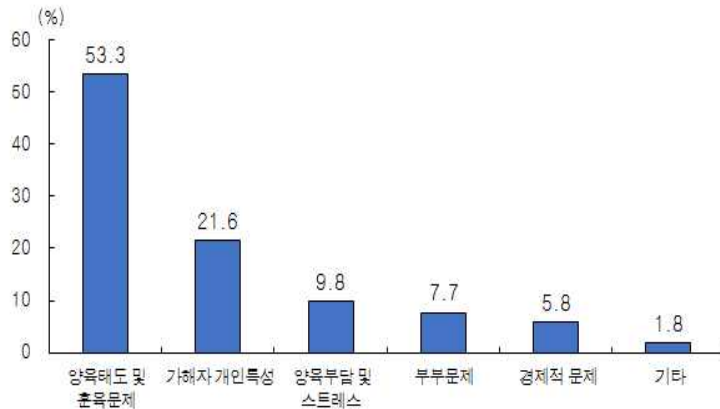
아동학대 가해자의 연령별 구성비율, 2011-2015



주: 1) 부모는 친부, 친모, 계부, 계모, 양부, 양모 등임.
 2) 친인척은 친조부, 친조모, 외조부, 외조모, 친인척, 형제자매 등임.
 3) 대리양육자는 부모의 동거인, 유치원교직원, 초·중·고 교직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보육교직원, 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청소년시설 종사자, 기타 시설 종사자, 위탁부, 위탁모, 베이비시터 등. 4) 타인은 이웃, 낯선 사람 등임.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연도.

- 가해자가 아동을 학대한 가장 주된 동기는 양육태도 및 훈육 문제가 가장 많고(53.3%), 개인의 특성(21.6%),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9.8%), 부부문제(7.7%), 경제적 문제(5.8%) 등의 순임

아동학대 동기별 구성비율,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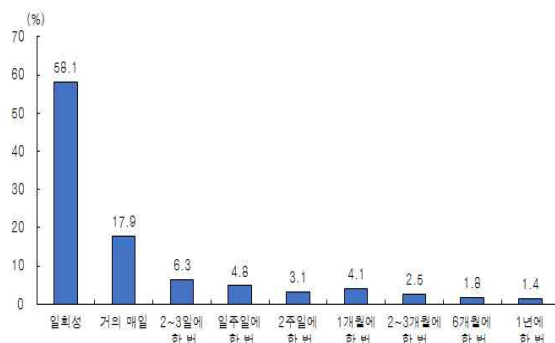


- 주: 1) 양육태도 및 훈육문제는 적대적·통제적 양육태도 및 과도한 훈육, 부모 역할과 양육에 관한 기술 부족 및 지나친 기대 등임.
 2) 가해자 개인특성은 평소 폭력적 성향이 아동에게 적용, 알코올 중독, 어릴 적 학대경험, 가해자의 불안, 우울, 기타 정신질환, 산후우울증, 충동이나 감정 조절 불능 등임.
 3)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및 사회적 지지 부족, 장애아동 부모로서의 스트레스, 원치 않는 아동이거나 아동에 대한 온정 결핍 등임.
 4) 기타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혐오, 미신, 종교 등임.
 5) 미상 제외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아동학대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2015.

- 아동학대는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58.1%로 가장 흔하지만 거의 매일 발생하는 경우도 17.9%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일회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학대의 빈도가 높을수록 발생 비중도 높음
- 학대가 지속된 기간은 일회적인 경우가 가장 많으나, 1~9년이 19.4%, 10년 이상도 1.5%나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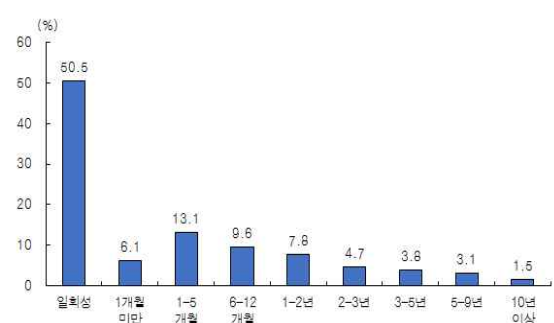
아동학대 빈도별 구성비율, 2015



- 주: 1) 미상 제외.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아동학대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2015.

아동학대 피해기간별 구성비율,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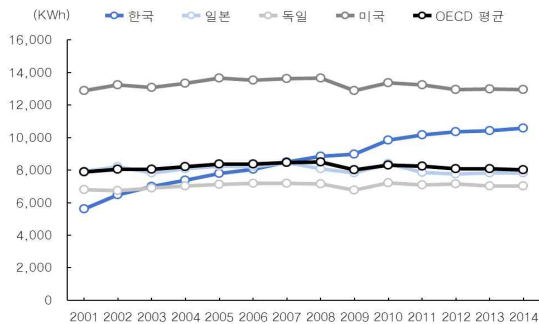
5. 환경

가. 전력소비와 전원구성의 추이 및 특징

한국의 전력소비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력 발전량 중 원자력과 석탄발전의 비율이 2015년 70.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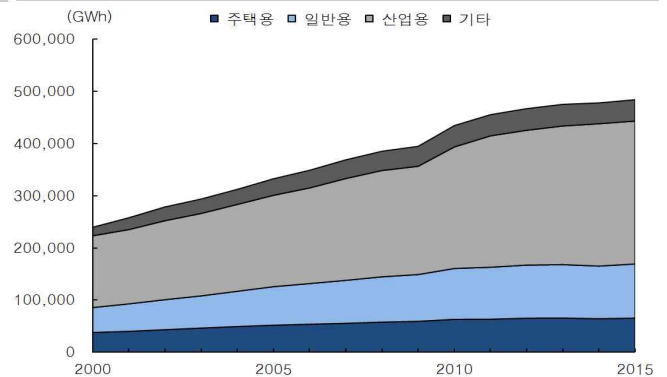
- 한국의 전력소비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8년 이후 1인당 전력 소비량이 OECD 평균을 넘어섬
- 특히 산업용 소비가 2015년 56.6%로 주택용 13.6%, 일반용 21.4%, 기타 8.4%에 비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OECD 주요 국가의 1인당 전력소비량, 2001-2014



출처: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03-2016.

용도별 전력소비량,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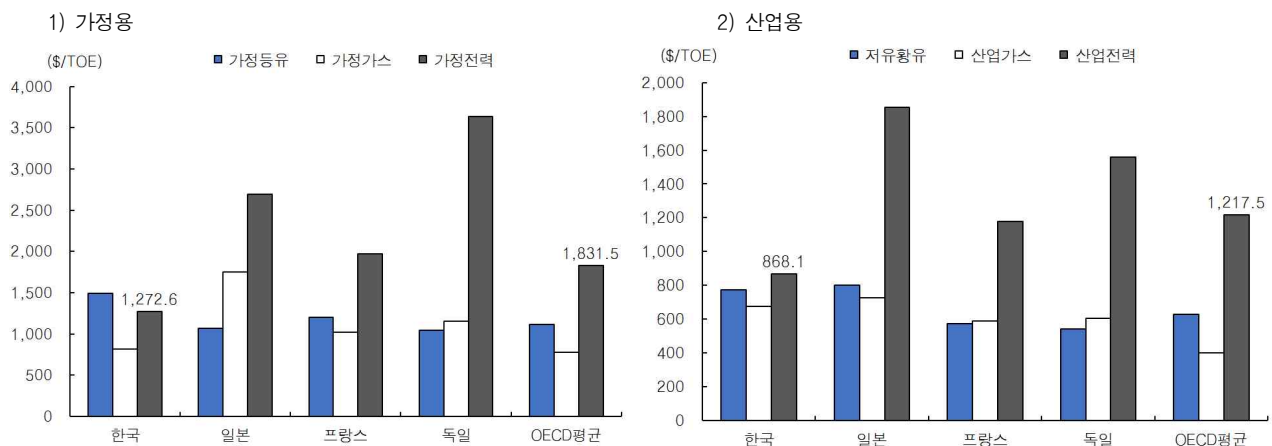


주: 1) 기타는 농사용, 교육용, 가로등 및 심야전기임.

출처: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http://epsis.kpx.or.kr/epsisnew/>).

- OECD 회원국과 2005~2014년 10년간의 열량가격 평균치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전력요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낮음

OECD 주요 국가의 가정 및 산업용 에너지열량가격(2005-2014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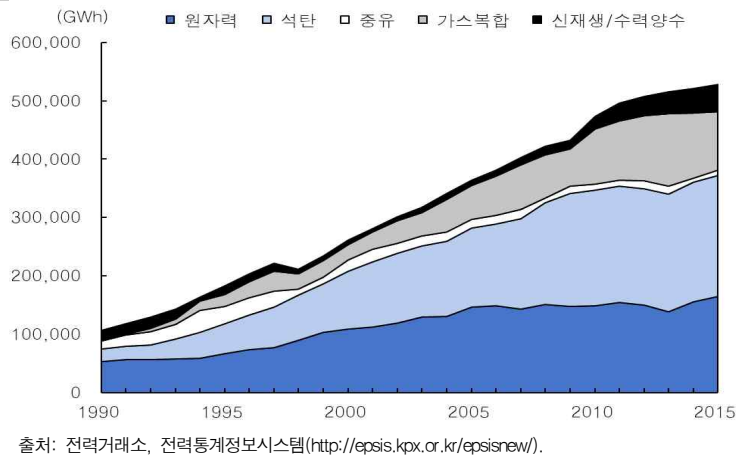


주: 1) NCV 기준.

출처: IEA, Energy Prices and Taxes, 2012 Q1-2017 Q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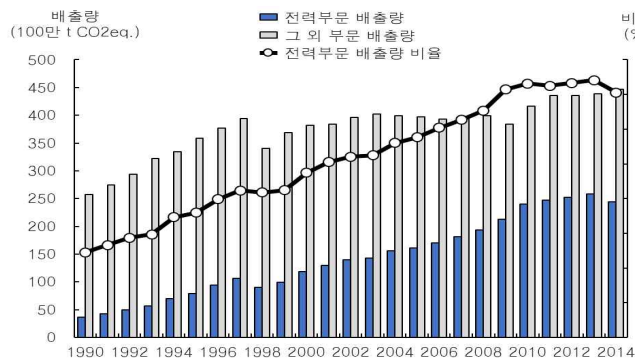
- 한국의 전력 발전량은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이 2015년 70.5%로 70%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설비별 발전량 주위, 199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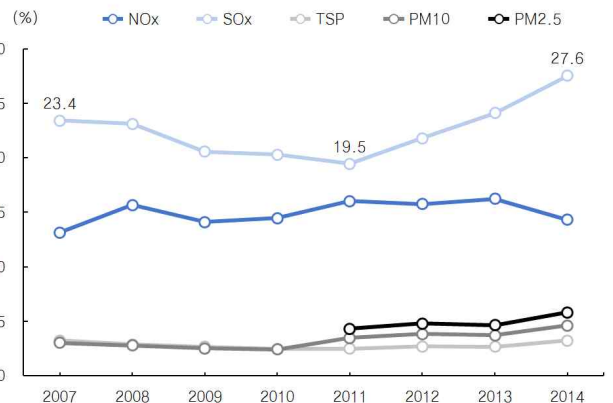
- 석탄발전이 주도하는 전력부문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주요 요인임
 - 온실가스 배출량 중 전력부문의 배출량은 상당한 비율(2014년 35.3%)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9년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미세먼지 2차 생성의 원인인 황산화물(SO_x)의 총 배출량 중 전력부문 배출량 비율이 석탄 발전의 증가와 함께 2011년 이후 증가함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율, 1990-2014



주: 1) 전력부문에 극히 미미한 열전환의 배출이 포함되어 있음.
 2) 전력부문 배출량 비율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전력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6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16.

대기오염물질별 전력부문 배출량 비율, 2007-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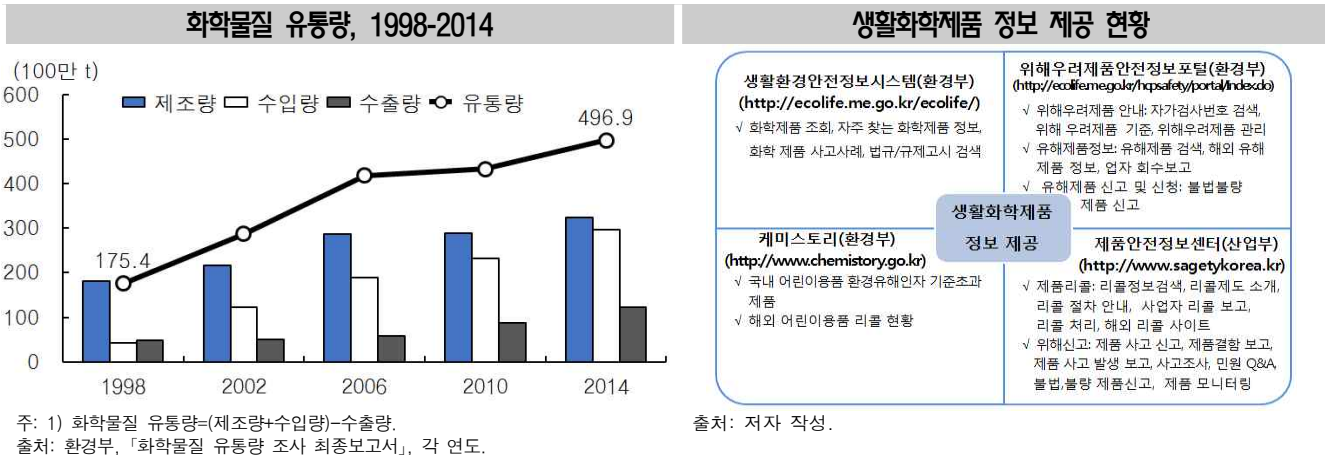


주: 1) 대기오염물질별 총 배출량 중 에너지산업연소(전력부문) 배출량 비율
 2) 2007년 산출방식 변경으로 2007년 이후만 산정하였음.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배출량통계」, 각 연도.

나. 생활화학제품의 피해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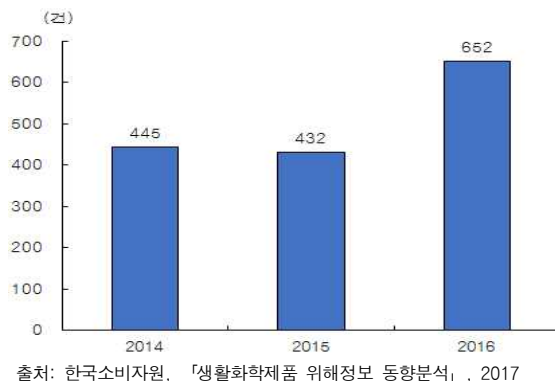
생활화학제품 증가에 따라 함유된 유해물질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부처별 분산관리에 따라 각각 정보 제공

-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4만 여종이 넘고, 매년 2천 여종의 신규 화학 물질이 새롭게 시장에 등장하는데 금지, 제한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72종에 불과
 - 화학물질 유통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기준 연간 약 5억 톤에 달함
-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위해우려제품) 및 살생물제품, 산업부는 공산품 및 전기 용품,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위생용품, 의약외품, 화장품은 분산관리함
 - 위해우려제품안전정보포털,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을 통해 각각 정보 제공



-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피해 상담건수가 2016년에 크게 증가(50.9%)함
 - 품목별로 접착제(25.5%), 표백제(18%), 세정제(12.9%) 순으로 상담건수가 많았고, 피해 연령대는 '10세 미만' 어린이 비중이 가장 높았음

생활화학제품 피해 상담 접수 건수, 2014-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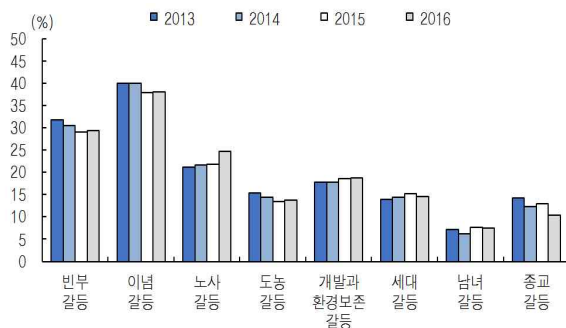
6. 사회통합

가. 한국의 사회갈등과 부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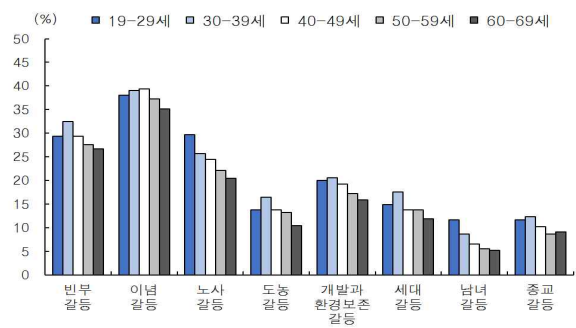
한국인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갈등은 여전히 이념갈등이며, 공직부패 경험자 비율과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임

- 한국인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갈등은 이념갈등이며, 이념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40%에 달했다가 2016년 38%로 감소
- 연령집단별로 보면 노사갈등의 경우 20대가, 빈부갈등과 세대갈등의 경우 30대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사회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 2013-2016



연령집단별 사회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 2016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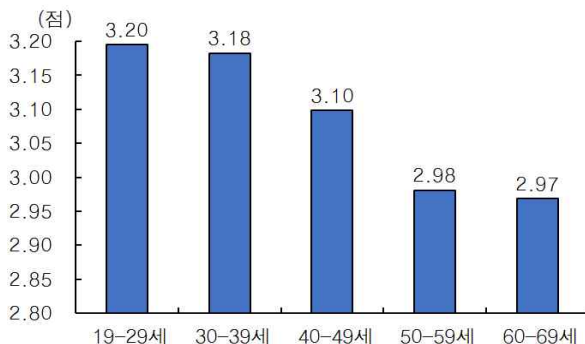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심하지 않다', '별로 심하지 않다', '약간 심하다', '매우 심하다' 등 4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 심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 부패인식의 차이를 연령집단별로 보면 20대의 중앙정부부처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이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짐
- 공직부패 경험자 비율은 2000년 24.8%에서 2016년 3.5%로 크게 감소한 반면 공직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6년 62.3%로 여전히 높음

연령집단별 중앙정부부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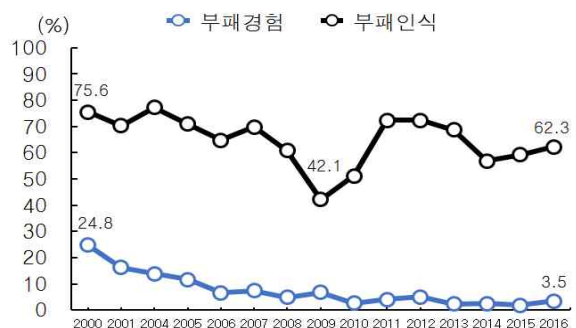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중앙정부 부처가 얼마나 청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청렴하지 않다', '별로 청렴하지 않다', '약간 청렴하다', '매우 청렴하다' 등 4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 청렴하다'부터 '전혀 청렴하지 않다'까지 1-4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심한 것을 나타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6.

공직부패에 대한 경험과 인식, 2000-2016



주: 1) 전국 일반 기업체 종사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함.

2) 부패경험은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간 공직자에게 금품, 향음, 편의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부패인식은 조사대상자 중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음,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해 '약간 심각하다' 또는 '심각하다' 또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정부부패 실태에 관한 연구」, 2016.

□ 용역수행기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연구 총괄책임: 이재열(서울대학교 사회학과)

□ 영역별 집필자

영역	집필자
노동	권현지(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소득과 소비	박정수(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김기호(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유승동(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주거와 교통	장수은(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영성(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유현지(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한상진(한국교통연구원)
환경	김중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신용승(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영탁(한밭대학교 경제학과)
안전	박두용(한성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이희일(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회통합	한준(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원호(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준(한국행정연구원)